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12호 관련)

2022. 1. 19.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1월 19일(수) 14:00~18:11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4호, 제6호~제12호 및 보고 제1호~제2호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의결 제4호~제5호, 제7호~제12호, 제250호(2021) 및 보고 제1호~제2호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12호 『(주)한진칼 주식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 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법률대리인 ◆◆◆임. (주)XXXX과 (주)▲▲▲▲, (주) ■■■■이 고의로 보유목적 변경보고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XXXX이라고 앞으로 통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XXXX이 2019년에 (주)OOO 지분을 매입해서 단순투자목적으로 보고를 했음. 회장님이 2019년 12월 중순에 (주)OOO의 ◇◇◇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난 대화의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실로 공시를 지연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XXXX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까지 경영참가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사전검토도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주식을 Block deal을 통해서 매각해서 그 차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증권사와 논의하였음. 한편, 이 주식을 매도할 때도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그룹회장은 관여하지 않았고, ●●● 전무와 (주)XXXX의 대표이사가 협의해서 이를 결정했고 공시를 할 때도 지금 같이 출석한 ○○○ 상무가 법무법인 ○○○의 ☒☒☒ 변호사에게 공시업무를 위임해서 모든 공시업무를 진행하였음. 따라서 XXXX이 본 건에 있어서 변경공시를 하지 않은 것은 그룹회장이 ◇◇◇ 회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그 대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를 못한 것이지, 이를 알고도 공시를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 회장이 이 건에 있어서 (주)XXXX의 ‘사실상 대표자’로 되어 있지 않고 공시업무에 관여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았음. 따라서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XXXX이 (주)OOO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었고 OO家の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을 끼친 것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OO家 같은 경우에는 ☆☆☆씨가 2019년말 내지는 2020년 1월말 정도에 OO家와 결별하고 △△△△ 및 (주)XXXX과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장벽이 생긴 것일 뿐이지, (주)XXXX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과 관련되어 보유목적 변경의 보고가 늦어진 것으로 인해서 경영권 방어에 어려운 점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 (진술인) (주)XXXX ○○○ 상무임. 1월10일 이전에는 저희가 명확히 단순투자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에에는 관심이 없지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최소한 안전한 방향은 목적을 변경해서 경영참여로 해 놓고 단순투자를 해도 관계가 없으니깐 그렇게 하자”는 쪽으로 해서, 안전한 방향으로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임.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함.
- ▶ (진술인) 지금 이 건에서는 이 회사 자체를 경영하는 사람들,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경영참가를 하겠

다는 어떠한 준비나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Block deal로 팔려고 했었음.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대화 속에서 경영참가의 의사가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목적을 숨겼다는 식으로 가는 것과 그러한 다른 사안들과 같이 본다는 것은 애초에 이 법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 이 사안이 다른 사안과 다르다는 그런 차이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람.

- (위원) 변경 공시에 대해서 회사 실무자는 ■■■■■씨와 ◇◇◇씨가 만나면서 나눈 대화를 몰랐다,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공시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시를 하는 것이 단순투자에 대한 공시인지, 경영참가에 대한 공시인지?

▶ (진술인) 이미 단순투자목적으로는 공시가 되어 있었고, 만약 12월 중순경에 회장님이 어떠어떠한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법령상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5영업일 내로 그때 공시를 했을 것임.

- (위원) 12월10일과 12월16일에 ◇◇◇씨와 ■■■■■씨가 만나서 임원 선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첫 번째 진술인의 말씀은 그 건을 경영참가 건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 (진술인) 만약 의제가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임.

- (위원) 대리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경영참가목적의 법적 요

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경영참가목적의 법적 요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요건, 그러니까 경영참가를 하겠다는 의사 자체가,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나타난 발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그러면 경영참가의 목적이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경영참가의 목적이 내심 준비도 되어 있고 확고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만 하고 나중에 좀 더 많은 지분을 얻는다든가, 그 시기를 뒤로 늦춤으로써 기존의 경영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은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경영참가목적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내심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표출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지?

▶ (진술인) 준비나 계획, 결국 내심의 의사를 받쳐주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 사람들의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처벌되는 것임.

○ (위원) 지금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준비나 계획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 ▶ (진술인)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2월말경까지는 단순투자목적으로 이것을 팔 생각까지도 했었음. 그러다가 1월8일에 신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논의가 되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안전한 방향이냐고 했을 때 경영참가목적으로 일단 변경을 해 놓자고 해서 1월10일에 공시를 하게 된 것임.
- (위원) 그렇다면 ◎상무님이 판단하시기에 (주)XXXX의 (주)OOO에 대한 경영참가목적은 1월8일이 기점이라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때도 확고한 경영참가목적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전한 방향, 예를 들어 단순투자로 했다가 경영참가를 하면 문제가 되니 경영참가로 해 놓자는 것이었음.
-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주)XXXX이 △△△△하고 ☆☆☆☆씨 쪽과 같이 한 편이 된 것이 아닌지?
- ▶ (진술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월15일 이후에, 저희가 경영참가목적으로 공시를 하니까 △△△△ 측에서 저희 쪽으로 1월15일경에 접촉을 해 왔음.
- (위원) 그러면 시간의 우선순서를 따지면 경영참가목적에 대해서 △△△△와 먼저 합의를 한 후에 경영참가목적을 공시

한 것이 아니라 경영참가목적을 공시한 이후에 △△△△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12월10일, 12월16일에 ■■■■■ 회장님께서 ◇◇◇ 회장을 만난 사실을, 회사에서는 ●●● 전무님이 공시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 회장님께서 ◇◇◇ 회장뿐만 아니라 ■■■, △△△ 이런 분들과도 쪽 접촉을 하셨던 것 같음.

▶ (진술인) 사모님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음.

- (위원)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접촉이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12월16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행위가 나타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일부터 19일 사이의 Block deal, 이 Block deal 접촉을 ●●● 전무님이 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리고 10일부터 28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주식매수를 함. 주식매수는 이 지분을 6점 몇 퍼센트에서 8점 몇 퍼센트로 올려서 중간에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 역할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 아무튼 Block deal과 주식매수라는 두 가지 양태가 나타나는데, 그 의사결정자는 누구이고, 왜 그러한 상반된 행위가 나타난 것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진술인) 의사결정자는 ●●● 전무임. 투자라는 것은 자금을 가지고 있고 투자이익이 생길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사게 되는 것임. 만약에 Block Sale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때까지 샀던 부분을 다 팔았을 것임. 또한, “Block Sale을 하자”고 해서 “그러면 더 이상 매수는 하지 말자”고 결정한 것은 아님.

○ (위원) 1월8일에 회의를 하고 1월10일에 공시하게 된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1월8일에 경영참가의 여부가 결정된 것인데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경영참가로 결정한 결정적인 다른 요소나 계기가 있는지?

▶ (진술인) 만약 향후 경영참여의 목적을 가질 것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경영참가로 바꾸어 놓자, 구체적인 경영참가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참가로 바꾸어 놓

자는 것이었음.

- (위원) 아까 말씀하신 ☆☆☆씨와 △△△△와의 접촉은 1월8일 이전에는 없었는지?

▶ (진술인) 없었음.

▶ (진술인) 아까 말씀하신 연말하고 1월8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씨가 ◇◇◇◇ 회장과 가족들 간의 불화가 생기면서 분열의 조짐이 있으니까 아마 △△△△에서도 그것을 보고 연락이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위원)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그 요약본을 보면 ‘과실에 의한 지연공시에 불과한 사안을 수사기관 통보 조치까지 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보유목적이 잘못 보고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과실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가정적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한 보유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보유목적은 잘못되었지만 과실에 의한 지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통보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목적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아까 가정적인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고민을 해야 될 쟁점(issue)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보유목적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룹회장이 (주)XXXX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주)XXXX 밖에 있는 그룹회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대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주)XXXX 입장에서는 보유목적 변경이 그렇게 변경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임.
- (위원) 만약에 ■■■■■ 회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회사의 대표자가 가서 얘기를 했다는 그 내용만 봤을 때 보유목적 허위 보고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회사의 의견은 어떤지?
- ▶ (진술인)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봐야 되겠습니까마는 편집되어서 일부만 드러나 있는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만약 (주)XXXX의 대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보유목적이 경영권 참여 목적이라고 읽힐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 (진술인) 저는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움. 설사 그것이 ■■■■■ 회장이 아닌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어느 회사 대표이사의 돌아가신 아버님을 위로하기로 한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야, 나 자리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영참여라고 생각하지는 않음.
- (위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이 들어갔는데

혹시 우리가 5% 보고위반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 섞인 상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신청을 낸 것 아닌지? 이렇게 먼저 제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공격해 올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안전하게 허용가처분을 제기하자고 논의해서 진행이 되었음.

○ (위원) 아까 ◆◆◆ 변호사님께서 모두진술 후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 회장의 녹취록 내용을 들었다면, 만약 알았다면 공시를 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주장하기를 ■■■■■ 회장은 감독자도 아니고 행위자도 아니고 회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의 얘기한 녹취록의 내용을 회사 측에서 만약 알았다면 공시했을 것이라는 얘기와 행위자도 아니고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닌지?

▶ (진술인) 저는 M&A 자문하는 변호사임.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면 저는 “안전하게 가자. 이것 빨리 공시하자.”고 당연히 얘기했을 것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음. 저는 회사는 회장님이 나가서 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시의무와 관련해서 고의가 있었느냐는 지점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임.

- (위원) 명확하게 ■■■■■ 회장이 회사의 직접적인 경영진으로서 의사를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회사와 관계가 있으신 분이니까 ◇◇◇ 회장과 만나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법률전문가로서 알았더라면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지?

▶ (진술인) 저는 그렇게 자문을 했을 것임.

- (위원) 2020년 3월24일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월16일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 봄. 그러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아무리 의결권 허용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일치한 상태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임. 그것과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위한 판단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달라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적인 판단 말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임.

▶ (진술인) 저희의 근본적인 주장은 경영참여 목적이 없었고 그것 자체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우리가 법원 결정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법원 결정이 100% 받아들여져서 이것이 법원 판단대로 12월16일이 경영참여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인다면 그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임.

○ (위원) (주)XXXX의 한 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사고 (주)XXXX 전체 자산의 약 60%를 매수했는데, 녹취록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저희가 (주)OOO에 대해서만 주식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장사에 대한 주식투자를 하고 있음. (주)OOO에 대한 주식투자는 여러 가지 주식투자의 일환으로 했던 것임. (주)XXXX이라는 한 회사로 보면 안 되고 저희가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XXXX은 어느 한 사업지의 시행을 위한 시행회사임. 그래서 그 회사가 시행을 완료해서 갖고 있던 자금, 전체적인 그룹차원에서 자금을 쓴 것이지, (주)XXXX 한 회사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음.

○ (위원) 참여한 3개 회사 그룹 전체 자산의 얼마, 이런 식으로 보라는 말씀인지?

▶ (진술인) 3개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임.

○ (위원) 전체 그룹으로 보면 이것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 (진술인) 저희가 그 당시에 현금자산만 한 6,000억 원 넘게 가지고 있었고, 그때 건설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음. 현금자산이 한 6,000억 원 정도 있었고, 만약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면 1조 원까지는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었음.

- ▶ (진술인) 아까 위원님께서 가처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와 지금 다르게 주장하는 것이 없다면 이 증선위에서의 결정이 그 판결과 달리 될 수 있는 근거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음.

○ (위원) 맞음.

- ▶ (진술인) 그런데 그 가처분 사건은 이미 저희가 패소했고 주총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후적인 실익이 없어서 그대로 1심에서 끝난 것임. 더 다룰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확고부동(確固不動)하게 인정됐다고 하기는 어려움.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사건이 일어났던 2019년 말에는 저희가 단순투자와 경영참여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고, 2020년 2월에 일반투자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서 단순투자, 일반투자 그리고 경영참여 이 3가지로 바뀌었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반투자와 관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됨. 이와 관련, 금감원에 법 개정 전 일반투자가 없었을 때에 ■■■■에서 단순투자와 경영참여를 어떻게 정의(define)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보유목적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 왔는지, 아예 안 한 것과 했는데 보유목적은 달리한 것 둘 사이의 가벌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이 사실상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금감원이나 자조단 쪽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함. 위반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열려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임.

- (위원)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꼭 관계가 있지는 않음. 하지만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같이 연결이 됨.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관련 규정을 고치고 개정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금 금감원 국장님께서 제재 양정기준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비교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짚어볼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으로 유사사례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이 건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